

大學의 豫算 공개

金 東 建

(서울大 行政大學院)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에 걸쳐 經濟的 位置가 크게 격상되면서 政治的 環境이 급격히 변화하여 왔다. 이러한 와중에서 大學의 運營 방식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大學 總長을 직선제의 절차를 밟아 선출하는 곳이 점차 늘고 있고, 大學 運營의 民主性·自律性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실정이다. 私立大學의 등록금 결정 정책을 보더라도 종래의 정부 통제 형태에서 벗어나 大學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면서 政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권장 사항만을 제시하도록 바꾸어진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運營의 변화는 大學으로 하여금 책임과 권한을 함께 지니게 하면서 大學이 스스로 사회적 공공성의 원칙을 실천해 나갈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는 계기를 마련케 할 것이다. 지금까지 大學의 運營에는 政府의 과도한 직접 통제하에서 不合理과 적당주의가 만연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결국 大學 運營을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게 하고 심지어 不信의 대상으로 전락케 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했던 것이다.

이제는 時代的 상황에 부응하여 大學이 각성하고 앞장서서 자율성의 확보와 더불어 모든 것을 公明正大하고 공개적으로 運營하는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하나의 대표적인 과제가 바로 大學 豫算의 公開化이다.

大學의 豫算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며, 사실 그동안 각 대학이 豫算書 및 決算書를 작성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그 결과가 성실하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점이 내재되어 왔다. 최근 일부 大學이 학내 분규에 휘말렸던 것도 豫算의 공개 측면에서의 불성실과 財團에 대한 不信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몇 년 전에 私學 財政의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入學 寄附金 制度'가 공청회 등에서 새삼 논의되었을 때, 일부 私學 財團에서는 이 제도의 채택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바가 있다. 반대의 이유로는 '入學 寄附金 制度'가 선진국에서는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活用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 풍토에서는 적합한 것이 못된다는 것이었다. 즉, 이 제도가 社會正義에 위배될지도 모른다는 문제점 이외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運營하는 데의 어려움으로서 大學 運營에의 不信 風土를 지적하였다. 학교가 아무리 이 제도를 성실히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공연히

부작용만 생기고 대학 운영을 도리어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견해였다.

일견 이와 같은 반대 의견이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밝혀졌듯이 많은 私學이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암암리에 ‘入學 寄附金 制度’와 다를 바 없는 방법을 실제로 택해 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私學 財團은 음성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入學 寄附金 制度’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는 이러한 작태가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豫算을 포함한 大學 運營 전반이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각 私立大學의 자율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회계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완전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각 사립대학의 회계 처리의 기준을 주식회사의 企業會計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바꾸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公認會計士 등에 의한 공신력 있는 외부 감사를 실시하여 이를 완전 공개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르기 위해서는 기존의 大學 財政 관련 法을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사립대학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통제는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사립대학의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통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公認會計士 등에 의한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해놓고서 政府가 거듭 다시 감사를 하고 이런 저런 간섭을 가하려고 한다면 私學은 결국 二重의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大學의 입장에서 理事會를 개방적으로 구성하고 새로운 出資者들이 생길 때 대학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이들을 理事로 받아들이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長期的 안목에서의 대학 발전 계획을 세워 여러 基金을 조성하고 寄附金의 모금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대학의 財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공개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政府도 私立大學의 재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私學의 財政이 어렵다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 自明한 사실이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學生 負擔이 큰 것을 감안한다면, 政府가 어떤 획기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할 때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이와 같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중요하고, 한편으로 교육에 대한 國民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여 民間資本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誘引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大學 운영의 公開化와 政府의 재정 지원은 私學뿐만 아니라 國·公立大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國立은 私立에 비해 예산 운용상에 더 많은 제약과 통제를 받고 있다. 그것은 大學의 豫算會計制度가 정부의 一般會計 제도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國立大學 特別會計 제도를 도입하여 국립대학으로 하여금 예산 운용의 자율성과 재원 마련의 융통성을 부여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 운용의 과정과 결과를 성실히 공개토록 하여 일반의 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國立大學에 特別會計를 도입한다고 하여 모든 것이 자율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의 상태보다는 훨씬 개선될 것이다.

그동안 政府는 大學을 비롯한 전체 교육 부문의 재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 지원의 규모는 영세하다.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地方政府 차원에서 教育財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별로 高等教育發展 特別基金같은 것을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서 地方大學이 그 지역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연계를 확립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